

국가론을 통해 본 한국 페미니즘운동과 '녹보라적 정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광일**

이 글은 196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는 한국 페미니즘운동을 1991년 '5월투쟁',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 전개된 페미니즘운동의 이론, 실천의 궤적을 국가론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그 역사적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다. 특히 각 시기에 전개된 페미니즘운동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이 어떻게 그 운동들의 안팎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끝으로 워마드 등 대중운동적 성격을 지닌 급진페미니즘운동이 부상하는 시기에 '정체성의 정치'로부터의 탈피를 목표로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이 제안했던 '녹보라적 패러다임'의 이론, 실천적 의미를 드러내고 그런 전향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국가론이 빈곤한 이유, 그리고 그것의 재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주제어: 국가이론, 페미니즘, 성주류화, 자유(다원)주의국가론, 워마드, '녹보라적 패러다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7268). 의미 있는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1. 들어가는 글

이 글은 국가론을 통해 1960년대 제3공화정 이후 한국 페미니즘운동들의 이론과 실천이 노정하고 있는 의미와 한계를 고찰하여 그 대안으로 ‘녹(생태)-보라(페미니즘)-적(노동) 정치’의 이론, 실천적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전개되어 온 ‘미 투(me too)-위드 유(with you) 운동’은 페미니즘운동 안팎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권김현영·루인·정희진·한채윤 2019). 물론 과거, 현재의 성폭력과 트라우마로 고통받아 온 여성들의 고발, 그것에 대한 각계의 연대선언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운동의 성격과 의미를 하나의 틀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으로 그 고소, 고발들에 대해 집요한 반발(backlash)(팔루디 2017; 최진협 2018 참조)이 계속되고, 다른 한편 그것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성차별 및 배제의 관행을 재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그럼에도 그 운동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는 폄훼될 수 없는데 그 운동이 ‘정의의 타자로 존재하는 법’(테리다 2004)이 아니라, 그 법의 존재와 의미를 규정하는 다른 하나의 힘, 즉 기존의 질서 속에서 정당하게 고려되지 않는, 고통 받는 여성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실천, 즉 정치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운동의 진전 여부는 결국 여성 주체들 사이의 관계, 페미니즘운동 내부의 긴장, 갈등을 문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외적인 모순과 긴장들은 내적인 그것들을 매개로 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근인’으로서의 가부장제의 극복을 문제시할 때, 결국 그 시선이 페미니즘운동들 자체가 안고 있는 이론, 실

천적인 긴장,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해소, 극복하고자 하는가의 문제로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여성 그 자체는 하나의 단일한 블록이 아니라 계급, 지역, 인종, 민족, 세대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시공간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이질적(eclectic) 존재이기에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페미니즘운동은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손희정 2017)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반여성적인 사회관계들, 그에 내재하여 그것을 재생산하는 권력관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의 빈곤, 부재의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에 그렇다. 그것은 그람시(A. Gramsci)가 말한 ‘위기’라 할 수 있는 것으로(Gramsci 1971), 결국 그 위기는 그 관계들의 해소, 극복을 목표로 삼고 있는 진보적 페미니즘운동, 특히 ‘녹보라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역설하는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의 이론, 실천적 영향력의 빈곤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지금까지의 페미니즘운동들이 어떤 국가론적 발상, 논의에 근거해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페미니즘운동의 ‘녹보라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장해온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고정갑희 2011; 고정갑희 2017; 고정갑희 2019)은 과연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이며 그것의 극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론, 실천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국가론을 다룬 페미니즘연구들이 빈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워마드 등 ‘래디컬 페미니즘’의 부상과 함께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외전상 급진적으로 보이는 언술이 제기, 통용되고 있는 바,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 언술이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고자 하는 페미

니즘운동, 무엇보다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의 의미 있는 이론적 시도들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글은 국가론을 매개로 한국 페미니즘운동의 이론과 실천들이 드러내고 있는 의미와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정치는 ‘정치과정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협의의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사회관계들, 그 관계들의 재생산을 위해 그것들에 내재해 작동하는 권력관계들의 재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이한 사회, 정치 세력들 사이의 이론, 실천적 쟁투로 규정된다(이광일 2009a). 이에 따르면, 흔히 ‘정치’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운동은 수단을 달리하는 정치이며 따라서 페미니즘운동 또한 정치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정치인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정치(국가)가 현존(presence)해 있다는 테제(Poulantzas 2014; 알튀세 1991 참조)를 수용한다면, 여성과 남성이 맺고 있는 관계에 정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이미 제2의 물결 이후 페미니즘 안에서도 강하게 암시된 바 있는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언술이 그것이다(Lister 1997; 김보명 2016).

이런 발상에 근거하여 이 글은 기존의 페미니즘운동들이 그 궤적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기대거나 수용해 왔던 국가에 대한 인식들을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주류의 자

유(다원)주의국가론은 물론 맑스주의 안의 도구주의적 국가론, 기계론적 국가론, 그리고 (전략)관계적 국가론 등이(Clarke 1991; 제습 2000) 참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그런 연구목적수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기초적인 것으로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 방법이다. 특히 그 분석대상에는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생성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 성과들, 그 운동과 관련해 생산된 문서들, 구술 등이 포함될 것이다.

둘째, ‘정치적 맥락분석(politico-contextual analysis)방법’이다. 기존의 연구들, 문서 그리고 구술 등의 텍스트를 서로 교차하여 검토하는 ‘상호텍스트 분석(inter-textual analysis) 방법’만으로는 전체적인 정치지형에서 상이한 성격과 위상 등을 지니고 있는 페미니스트운동들의 언술, 행태에 담겨 있는 의미, 한계 등을 온전히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운동들이 제출하는 발상들, 그 실천적 행보들은 국가 안의 상이한 관료기구들, 제도 안의 상이한 정치세력들, 그리고 여타 상이한 운동세력들의 직간접적 개입에 대한 반응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보수-수구 독점의 정당-정치구조’에 주목할 것이다.

3. 한국 페미니즘운동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현실

한국 페미니즘운동들은 국가를 어떻게 인식해 왔을까. 이 질문은 매우 낯설게 다가오는데, 그 이유는 페미니즘과 정치, 국가의 관계를 둘러싼 이론적 흐름을 소개, 검토하고 있는 장미경의 연구(장미경 1999)를

제외하면, 그 이후 의미 있는 연구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현실을 낳게 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국가만이 가지는 있는 특성으로서의 편재성(ubiquity)에 대한 인식의 빈곤, 페미니즘운동이 1980년대 급진적인 노동운동처럼 반공분단체제, 그 위에 자리하고 있는 ‘보수-수구 독점의 정당-정치구조’에 도전하는 ‘대안운동’으로서의 위상(이광일 2009b)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은 기존의 페미니즘운동이 자유(다원)주의국가론, 가부장제국가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국가론 등에 비대칭적인 시선을 주도록 만들었다. 페미니즘운동이 가장 문제시하는 가부장제가 반공분단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재생산되어 온 역사특수적인 구조로 인해 페미니즘 안에서 특히 마르크스주의국가론은 의미 있는 대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1983년 출범한 여성평우회 내부의 논쟁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 ‘사회주의페미니즘’ 등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고(김영희 2002), 그런 문제의식은 1990년대 이후 원외의 진보좌파정당들, 혹은 연구자들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페미니즘운동이 그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다원)주의국가론, 그리고 가부장제국가론 등을 근간으로 국가를 이해해 왔다는 점을 반증해 준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궤적을 밟아 왔을까. 이 글은 기존의 정치지형, 사회운동의 변화와 맞물린 페미니즘운동의 궤적을 국가론과 연결시켜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기준은 1991년 ‘5월투쟁’과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다. 91년 5월투쟁의 경우, 1987년 6월항쟁으로 진전된 정치적 자유화,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과 맞물리며 노동운동 중심의 1980년대식 사회운동의 한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페미니즘이 시민운동의 성장과 행보를 맞추며 다방면에서 자신의 요구들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2016

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민주정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성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을 매개로 성장한 주류 페미니즘운동의 제도화, 보수화를 비판하면서 미러링 등의 전술을 가지고 운동을 주도한 메갈리아, 워마드 등 급진페미니즘운동이 대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이 흐름을 국가론과 연결해 그 대강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3공화정 이후 91년 5월투쟁 이전의 시기는 페미니즘운동이 직간접적으로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을 공유하면서 그것의 실현을 위해 권위주의, 공개적 독재체제와 대결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91년 5월투쟁부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사이의 시기는 페미니즘운동이 자신들을 규정해 왔던 기존의 노동운동 중심성을 비판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자유주의 정치체력의 집권과정에 함께 하면서 ‘성주류화론’을 매개로 법, 제도적인 수준에서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을 실현하고자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이후는 성주류화를 통한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미투운동을 거치며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여성의 자유’의 문제에 집중하는 급진페미니즘운동이 등장하면서 가부장제국가론이 부상하는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1) 1991년 5월투쟁 이전-공개적 독재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등장과 대안으로서의 자유(다원)주의국가론

제3공화정 이후 1991년 5월투쟁 이전의 시기는 권위주의체제, 공개적 독재체제가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동원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전략을 추진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전략은 이미 5.16쿠데타 이후 군정의 홍보영화로 제작된 영화 「쌀」(신상옥, 1963)이 국가건설 과정에, 특히 중산층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상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런 흐름은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물질 기초를 마련한 제3공화정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기초한 ‘여성들의 경제발전에서의 통합(women's integration into economic development, WID)’이라는 전략으로 표현되었다(허성우 2006; 마경희 2009). 그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그 하나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농촌(농민층)의 분해, 도시화 등과 맞물려 주로 사회하층의 여성들을 ‘산업전사’로 호명하면서 생산 현장에 포섭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각 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풀뿌리조직’인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장미경 2009), 또한 그 활동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 제공해 왔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등과 같은 조직 등을 매개로 포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주도된 그 과정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터하고 있던 WID의 지향점, 즉 남성 중심적인 경제발전과정에 대한 비판, 그 위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통합이라는 목표의 퇴색을 가져왔다. 하나의 예로 새마을부녀회의 경우, 그 리더들은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보다 일반 여성회원들에 대해 ‘더 근대화된 주체’로 자신을 정체화하면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하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장미경 2009, 182-185) 여협 또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공조했던 WID의 지향과 목표를 ‘국가와 민족의 경제발전’에 종속시키는 활동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그런 괴리는 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선언, 72년 유신체제라는 공개적 독재체제의 등장으로 더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그 목표는 국가와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그 절실함은 정치지형의 반동화, 재권위주의화 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해 정치적 권위주의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평소 정치와 무관한, 사소한(trivial) 것으로 간주되어 온 관계 들조차 그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성격을 더 강하게 표출하게 된다 는 주장(Poulantzas 197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개적 독재체제가 시 민사회를 포획하면 할수록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사적 인 관계들' - 즉 노동과 자본, 남성과 여성의 관계 등-에 내재되어 그것 을 규정하는 비대칭적이고 부당한 권력관계들의 민낯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에 그렇다.

무엇보다 자본과 국가기구화된 한국노총, 산별노조 등의 지도부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권리 박탈은 물론,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의 대상 이 된 하층의 여성노동자들은(이옥지·강인순 2001) 자신들을 보호하기 는커녕 오히려 그 과정을 주도하는 국가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상 식의 수준에서 받아들여 왔던, 자신들을 탄압하는 현실의 국가도 끊임 없이 강조해 온 국가의 상, 즉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외부에 존재하면 서 불편부당하게 작동하는 국가, 그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국가-이른바 자유(다원)주의국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 해 얻는 것이라는 점을 실감,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서구의 파시스트 들이 '여성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프롤레타리아 매춘부'라는 용어와 호환하여 사용했던 것처럼(네오클레우스 2002) 유신체제 등이 자신들 의 항의, 저항을 '국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소명으로서의 노동' 을 거부하는 행위로 보면서 용공분자, 빨갱이로 내모는 상황은 그런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하지만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저항, 투쟁은 '여성운동'으로서보다는 노동운동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고 그런 특징 은 80년대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1987년 6월항쟁 전후부터 91년 5월투쟁 시기의 사회운 동들을 살필 때, 전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신군부의 재집권과 정치적 반동화에 대항하는 투쟁이 격렬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이후 진전

된 정치적 자유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등과 맞물리며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가 견고해졌다는 사실이다. 급진적인 노동운동, 정당 운동조차도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자신들을 배제한 체 수구세력과 타협해 만든 '87년 체제'를 넘어설 수 없었고 그런 정치적 상황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현실적 대안, 대세로 만들었다. 이것은 대안으로서의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의 영향력을 반증해주는 것이었다.

물론 이 시기에 여성운동은 이전과 비교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었으나 그 주류는 '반독재 민주화'라는 목표 아래 그것을 주도한 김대중, 김영삼, 그들을 지지하는 '재야' 등 자유주의 사회정치세력들과 행보를 함께 했다. 따라서 '젠더 불평등'의 해소, 극복을 당면의 주요모순으로 내거는 것, 그런 이슈를 쟁점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 현실은 1987년 2월 여협에 대응해 공식 출범한, '진보적 페미니즘운동'의 전국조직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활동의 목록들, 즉 86년의 여성노동자 생존권 지원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KBS시청료 납부거부운동, 부천시 성고문대책위원회 활동, 87년부터 91년 사이에 전개된 호헌조치반대 및 최루탄 추방운동, 민주헌법쟁취 여성협의회 활동,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활동, AIDS 추방운동, 가족법 개정운동, 핵발전소반대 운동, 일본군 '위안부문제' 대책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17). 또한 당시 여연의 대표를 맡아 이끌었던 이우정, 이이효재, 조화순 등 리더들이 제도 안의 사회비판적인 자유주의 정치세력, 그들을 지적, 도덕적으로 후원, 지지해 준 70년대식 재야운동, 그리고 그들의 지지, 후원 아래 전개되었던 민주노조운동 등과 함께 한 이력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페미니즘운동은 그 내부에 마르크스주의적인 급진적인 활동가, 연구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

시 급진적 노동운동 등이 그랬듯이 자유(다원)주의 정치세력, 자유주의페미니즘의 헤게모니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2) 91년 5월 투쟁에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전의 시기 -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의 실현 시도, 성주류화와 국가페미니즘의 딜레마

1991년 5월투쟁은 한국사회운동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90년 민주자유당의 출범과 정치적 재권위주의화, 그에 따른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이하 전노협)의 실체부정과 급진적인 운동세력 등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는 것과 맞물려 80년대식 운동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적 시민운동’이 출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와 관련하여 국가론의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80년대 이후 급진적인 사회변혁운동이 수용했던 국가론 가운데 마르크스 초기의 도구론적 국가론(맑스·엔겔스 2016), 레닌(V. Lenin)으로 상징되는 기계론적 국가론(레닌 2015) 등의 발상들이 주변화되면서 쇠퇴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에 경도되어 해석된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서구의 68운동과 관련된 신사회운동론 등이 급진적인 변혁운동을 비판하고 ‘진보적 시민운동’의 등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포되었다는 점이다(최장집 1989; 김성국 1995). 즉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이 자본주의의 극복이라는 정치전략과 연관된 논의였다는 점, 68운동의 이론적 표현인 신사회운동론이 반권위주의, 반관료주의 등을 매개로 과거 소비에트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서구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극복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축소, 배제된 것

이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 노동 등 민중운동의 급진화와 쇠퇴라는 현상을 매개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과거 여협이 공개적 독재체제에 놀려 WID에 담겨 있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비판적 문제의식을 거세한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변화에 새삼 주목하는 이유는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더 굳게 자리 잡게 된 배경을 환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는 페미니즘운동 내부에서의 국가론의 부침과 관련, 1980년대 중반이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을 매개로 소환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 대중운동의 수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페미니스트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된 현실을 다른 한 면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제 급진적인 발상들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이 노출하는 현실적 한계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담고 있는 경우에 주로 참고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여연으로 대표되는 페미니즘운동의 주류가 자유주의정치체력의 집권과정에 함께 하며 빠르게 제도화되는 과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은 국가를 상이한 이해관계들의 개인, 집단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법, 제도 등을 통해 그 갈등들을 불편부당하게 처리하는 실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런 발상을 수용하는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착취, 차별 등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구조화되어 작동하고 있는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 기인한다는 점을 수용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법, 제도의 빈곤, 공백에 따른 '우연적인,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점을 재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데, 여성평우회의 해산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급진적 여성운동그룹들과 결별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여연(유경순 2020. 참고)이 법, 제도를 통해 ‘같은으로서의 평등’ 혹은 ‘차이로서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WID 적 흐름에 그치지 않고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권력관계로서의 젠더’를 문제시하는 발상, 즉 GAD(gender and Development)에 자극받아 추진된 ‘성주류화전략’에 주도적으로 올라탔기 때문이다(김경희·나성은 2017).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논의는 ‘성주류화’의 의미, 그 실행 기제로서의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좀 더 구체화시켜 볼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성주류화는 일상적인 정책이 성별화된 사회제도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심적 요소이며 젠더불평등을 재생산, 재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마경희 2009, 85). 따라서 그 실행기체인 ‘젠더-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활동과정을 통해 ‘성평등’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각 정책주체들 사이의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가시화되고 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황은정·배은정·오나경·송문희 2015, 190. 참조).

그렇다면 핵심 문제는 ‘그 참여자들이 누구이며 그 기제를 누가 주도, 지배하는가’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여성정책과 제도의 적극적인 입안자로 기능했던 여연 등 진보적 여성운동이 이명박정부 이후엔 정치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지적(신상숙 2011)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성운동들이 특정한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 정권과 비대칭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입안되는 정책 또한 상이한 계급, 계층, 지역, 세대, 학력 등에 의해 영향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현실은 성주류화의 실행이 중앙 혹은 지역 공무원, 전문가, 시민운동(여성운동) 활동가. 의

회 관련자, 나아가 언론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가려진다(김경희·김돌순·최유진·장운선·문희영·박기남·장정순 2012).

하지만 직능의 다양성을 들어 민주적 정당성, 정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히려 ‘젠더-거버넌스’ 자체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해 줄 뿐이다.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의례를 수행하는 것(알튀세 1991)을 넘어,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적 제도의 일상적 작동을 요구하기에 그렇다.

따라서 ‘젠더-거버넌스’의 구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직능에 의해 분배된 참여자의 다양성이 아니라 그 참여자들의 사회적, 정치적인 성격, 위상 등이다. 사실 이 문제는 2차세계대전 이후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의 현실태로 간주되었던 미국민주주의에 대해 돔호프가 오래 전에 제기한 이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질문, 즉 ‘누가 미국을 지배하는가?’(Domhoff 1967)를 환기시킨다. 그들은 부유한 자본가, 경영인들로 대표되는 지배적인 계급, 그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치엘리트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한국전쟁이후 보수적인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수구적인 세력이 ‘시민사회’의 지지세력들과 융합되어 재생산하고 있는 ‘보수-수구 독점의 정당-정치체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를 준거로 국가기구들에 참여하는 대강의 비율 또한 정해지고 있기에 그렇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구,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그 양당의 추천, 실질적으로 그 양당에 소속된 대통령, 국회의장 등이 추천한 엘리트들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 지방정부의 기구들

또한 이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기존 질서를 비판하며 넘어서고자 하는 정치세력, 시민사회운동의 활동가들은 애초 그런 발상, 활동 자체가 제척사유가 되어 참여가 봉쇄되기 일쑤이다. 이른바 ‘제도적 선택성(institutional selectivity)’이 관철되면서(Wisler and Giugni 1996), 결국 ‘경로의존성’이 강제되는 것이다.

‘젠더 거버넌스’의 구성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성불평등의 원인, 해소 방식 등을 둘러싼 상이한 가치들, 실천들이 경합, 조정되는 ‘동결되지 않은 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거기에다 젠더불평등에 더 민감한 것으로 간주된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지난 미투운동의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로서의 젠더 불평등’에 민감하지 않으며, 그런 관계 위에 자리하고 있는 가부장제 자체를 문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우경화된 정당-정치체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보수적인 성격 등은 ‘성주류화’에 변혁적(transformative) 성격을 기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성주류화가 기존의 질서 및 그것을 받치고 있는 주체들과 긴장을 유발하며 성평등의 목표를 관철시키려는 ‘의제설정접근(agenda-setting approach)’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 복지 등 다른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통합주의적 접근(integrationist approach)’에 의해 구체화된 것(마정희 2009, 94-95)에 의해 확인된다. ‘참여정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성 주류화’를 기본적인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부처 사이의 연계성 강화, 성인지적 예산 도입, 성인지적 통계 작성, 각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요소들을 도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10대 국정과제 중에 여성부가 관련 부처로 상정된 것은 3개에 그쳤고 그것도 성평등이 아니라, 인구-가족정책, 소외계층 지원 분야였다(사실(신상숙 2011, 167-171 참고)은 그 증거이다.

이 과정에서 여연 등은 민주정부의 하위파트너로 기능하며 제도화, 보수화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시기 여연 대표를 맡았던 이들(한명숙, 이영순, 이미경, 지은희, 한명희, 신혜수, 이경숙, 정현백, 남윤인순)의 정치적 행적은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사실 여연 등이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주류화전략에 올라타 법, 제도적 성과를 내었음에도 제도화, 보수화되었다고 비판받게 된 상황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런 비판은 모든 사회운동들이 그렇듯이 기존 운동의 한계와 새로운 운동의 등장을 예고해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연 등이 주도한 당시의 법, 제도 개선운동을 엘리트 여성의 공직 참여와 지위상승을 목표로 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운동으로 평가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당시 여성운동이 채택한 참여 정치전략의 목표와 그 사후적 결과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황정미 2017, 26), 혹은 제도적 성과 이후 직면하게 된 예상치 못한 위기와 딜레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서두원 2012)이라는 비판은 과도하다. 그런 비판은 주류의 페미니즘운동이 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 사회주의페미니즘 등 급진적 이념들도 자기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그것을 자신의 얼굴로 내밀 수 있을 때, 혹은 상이한 성격과 위상을 지니는 페미니즘운동들이 ‘경로의존성을 강제하고자 하는 제도적 선택성’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되었을 때, 즉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어떤 민주화된 사회’를 전제로 할 때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비판들이 노출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법, 제도적 성과와 맞물려 드러나는 위기와 딜레마가 그 과정을 주도한 이들에 의해서는 온전하게 포착, 가시화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결국 그것들은 그 성과의 이면에서 여전히 주변의 경계로 내몰리거나 타자화되어 착취, 수탈, 배제, 차별당하는 삶을 사는 여성들, 혹은 그들에 주목하는 또 다른 페미니즘운동들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처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이미 도래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적 성격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성주류화를 ‘여성친화적인 국가페미니즘(woman-friendly state feminism)’의 실현으로 보는 인식 속에 더 분명히 담겨 있다. 거기에서 국가는 ‘단일한 가부장적 억압의 기제가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며 교차하는 장으로, 내부적으로 분화된 다양한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국가는 ‘젠더-거버넌스’와 같은 기제를 매개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급진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페미니즘 등과 차이를 지닌다고(이재경 역음 2009, 19) 인식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우선 문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페미니즘의 국가에 대한 규정이 현실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할, 현재-미래에 획득해야 할 국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이 국가페미니즘과의 사이에서 드러내는 근본적인 차이는 역사특수적인 자본의 재생산(계급관계의 재생산)에 국가(정치)가 구조적으로 관계한다는 점에 있다. 급진페미니즘의 가부장제국가론 또한 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국가가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그것은 곧 노동자, 여성들이 그 각축의 장 자체에 자유로이 진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젠더-거버넌스’가 ‘제도적 선택성(institutional selectivity)’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확장시킨 것과 같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페미니즘이 “다양한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며 교차하는 장으로서, 내부적으로 분화된 다양한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국가를 인식하는 것은 정확히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의 핵심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그런 인식은 권위주의, 공개적 독재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여성들의 이론, 실천적 쟁투

가 자유주의정치세력의 동맹세력인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운동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위기와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을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페미니즘운동 자체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운동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국가페미니즘이 더 풍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와 관련, 페미니즘의 의제가 사회민주주의와 교차하며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노동조합과 연계된 성평등 의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페미니즘 전략이 국가의 성격과 위상 변화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사회의 경우, 성주류화의 한계, 국가페미니즘이 직면한 딜레마가 기본적으로 ‘보수-수구독점의 정당체제, 정치구조’에 놓린 결과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오히려 아래의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민주정부’가 성불평등에 더 민감했기 때문에 성주류화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여연 등이 젠더불평등에 더 민감할 뿐만 아니라 투쟁적인 진보정당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하지 않는 이유, 혹은 그에 부합하는 정당을 건설하는데 나서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3)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 급진페미니즘, 자유(다원)주의국가론에 규율된 가부장제국가론

이른바 ‘민주정부’ 시기에 ‘젠더-거버넌스’를 매개로 추진된 성주류화전략은 법, 제도적 성과에도 불과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성폭력처럼 여

성들의 신체에 대한 기본결정권을 부정하는 행태 등의 심화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 정부에서조차도 여성정책은 불균등한 권력관계의 해소, 극복이라는 성평등의 준칙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의미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계속되었고 실제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김은실 2006; 양현아 2006). 그 결과 기존 주류운동을 명망 있는 여성활동가, 페미니스트 연구자 등이 전국,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한 엘리트운동으로 규정, 비판하면서 새로운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메갈리아, 워마드 등으로 이어지는 급진페미니즘운동이 그것이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더욱 가시화된 그 운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는데, 조직화된 운동집단보다는 일반 개인들의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점, ‘성평등’보다는 자유를 주장한다는 점, 무엇보다 여성을 생물학적인 성을 준거로 정체화한다는 점이 그것이다(김민정 2020).

그렇다면 그런 특징들을 낳은 구조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과 관련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97년 IMF관리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 지구화이다. 그것은 이 운동의 중심주체가 신자유주의 교육, 문화 등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성장한 ‘2030세대’ 혹은 ‘MZ세대’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들은 그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이외에 대안은 없다’(홀 2009)라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로 신자유주의가 이 사회를 재조직, 운영하는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준칙, 즉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윤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준칙을 내면화하면서 살아온 세대이다. 이른바 ‘자기계발의 시대’라는 언술이 그들의 ‘스펙쌓기’와 겹치는 이유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글로벌자본의 운동과 연결된 ‘디지털혁명’과 맞물려 확

대,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세대보다도 그 문화를 체화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넷페미’라는 별칭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그 과정은 ‘애초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언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 세대를 고립, 개별화시키는 자본, 국가의 전략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시도는 각 개인을 ‘자기자본을 운용하는 경영자(개인기업가)’로 만드는 기획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요시유키 2015, 48-56. 참고). 그것을 위해 통상 노동력의 구매를 통해 이윤을 취해 온 역사특수적 힘으로 간주되어 온 자본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적성’, 즉 노동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었다. 자본이 이윤을 낳는 것처럼 노동력도 ‘부가가치’를 산출해 낸다는 점에서 ‘(능력)자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력의 대가로 간주된 ‘임금’은 ‘이윤’이 되었고 더 많은 ‘이윤’을 얻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런 발상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자본, 국가의 운동 및 역할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두 가지 문제, 즉 자본 운동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모순에 대한 비판, 국가 혹은 여타의 공동체 등이 경쟁에서 실패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인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미 1941년에 ‘자본주의의 파산(자본가의 죽음)’을 선언했던 ‘경영자 혁명’(Burnham 2021)이 개인의 수준으로 확장되어 더 촘촘하게 실현된 마당에 자본과 노동의 계급모순을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경영의 책임이 경영자 자신에게 있듯이 ‘자기경영의 주체’가 된 각 개인의 성공 여부 또한 그들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기에 국가 등이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을 구제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각자도생’이 유일한 삶의 지표가 된 ‘자유로운 세계(a free world)’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워마드 등 급진페미니즘운동의 특징을 주조한 신자유주의가 다른 한편으로 여성혐오를 조장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제반 사회영역에 내재화시킨 무한경쟁구조와 노동시장으로의 여성의 적극적인 포섭, 그리고 성주류화전략에 따른 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의 진전 등으로 자신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남성 등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 여성에 대한 혐오, 폭력에 눈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워마드 등 급진페미니즘운동이 그런 현실을 만들고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경쟁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이다. 사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급진페미니즘운동이 전국 혹은 지역 조직, 학교, 학술조직 등을 통해 국가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접하며 의식화된 활동가, 연구자들이 주도한 기존 운동과 달리 성폭력과 차별, 괴롭힘 등에 분노하는 일반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사강·이재원·박동숙 2021). 그들은 주로 구체적인 사건, 경험 등을 매개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물론, 국가의 성격, 역할 등을 이해하고 있다.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국가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순적이예요.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래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서의 흐름 같은 것이 생물학적인 여성으로서 겪은 차별에 중심을 두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F)”(정사강 외 2021, 139에서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국가에 대해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 그들의 정치적 의지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언술로 모아지고 다른 한편 생물

학적인 차이에 기초한 급진페미니즘에 의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 초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흐름이 바로 차이에 근거한 ‘조합주의’ 혹은 ‘정체성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타자와의 경계, 정체성의 내포와 외연을 획정하는 것인데, 생물학적인 차이(이른바 생식기의 존재, 출산 유무)는 가부장제와 그것의 재생산을 위해 도구로 이용되는 ‘가부장제국가’의 성격과 위상을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경향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을 획정하고 국가를 자본가의 단순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때 ‘가부장제국가’는 남성의 이해를 직접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남성지배의 ‘적극적인 도구’이자, 그 지배체제의 유지를 정당화, 합리화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도구’이기도 한 것이다 (Connell 1990).

그렇다면 실제로 그들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언술을 어떤 의미로 수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 과거 노동운동(정치) 안에서 ‘노동해방’이라는 기표가 급진적인 정치리더, 지식인들에게는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반면, 노동자 대중에게는 주로 작업장 안팎에서 복장, 두발, 비인격적 대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모멸감을 주었던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는 점(김동춘 1995 참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국가론의 차원에서 보면, 대중은 자본가계급의 국가 자체의 폐절을 문제시하기보다 생산현장의 병영적 노동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그것을 담보해줄 ‘국가의 민주화’를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다. 이는 그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 대중들이 마르크스주의국가론의 영향보다 ‘불편부당한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국가’, 즉 자유(다윈)주의국가론에 의해 더 영향받고 있었음을 함축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발상이야말로 일반 대중이 공식적인 교육과정, 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습, 내면화해 온 지배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급진페미니즘운동이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하여 발화하고 있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언술에도 국가에 대한 두 가지 발상이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가부장제국가론이라면, 다른 하나는 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재생산되고 있는 자유(다원)주의국가론이다. 그런데 이 두 발상은 경합하기보다 후자가 전자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자본의 지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면서 ‘생물학적 성’을 준거로 발화되는 그 언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을 배제하는 그 언술은 그 인지,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를 ‘불편부당한 중립적 실체’로 파악하고 그 어떤 주체도 국가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자유(다원)주의 국가론의 기본발상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과 관련,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하여 발화하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는 언술에 더 주목하는 실천적인 이유는 그것이 여성해방을 위해 회피할 수 없는, ‘국가 없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헤게모니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그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를 기존 질서를 재생산하는 ‘치안유지자’로 만들고 있기에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급진페미니즘은 한국을 포함한 마르크스주의운동이 그 시공간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인식을 도구론에서 기계론으로, 그리고 관계론으로 발전시켜 나간 실천적 이유가 무엇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4.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의 ‘녹보라적 패러다임’-국가론의 빈곤과 재구성의 가능성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조합주의적 급진페미니즘의 등장 과정에서 ‘녹-보라-적의 연대’, ‘동맹’이라는 발상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태혜숙 2007; 태혜숙 2008). 그럼에도 그것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낳지 못한 이유는 그 발상이 전체 사회운동에서는 물론, 각 지역에서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여성운동 내부에서조차 대중적 호소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허성우 2009). 그것은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이 ‘녹-보라-적의 연대’, 혹은 ‘동맹’을 넘어 ‘녹보라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발본적 주장(고정갑희 2017)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갈리아, 위마드처럼 그에 반하는 운동이 대중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현실에 의해 반증된다.

그렇다면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은 급진페미니즘과 달리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조응하는 국가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고 있는가. 이들에게 국가는 남성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행사의 장이며 재생산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장치(고정갑희 2011, 214)로 인식되고 있는데, 주목할만한 것은 그때 국가는 “신체, 서사, 시장, 국가, 가족, 종교, 교육, 미디어라는 젠더장치/성장치”라는 표현(고정갑희 2019, 418; 고정갑희 2011, 208-219 참조)이 확인해주듯이 ‘남성지배를 위한 여러 장치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국가의 위상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다원(자유)주의 국가론을 떠받치는 골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국가에 대한 생각은 ‘성장치’가 알튀세의 이데올로기국가기

구 논의에 의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논의에 기대고 있다. 물론 성(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이 비대칭적이고 부당한 관계들의 재생산을 규정하는 근인이기에 마르크스주의 개념들(계급, 국가, 이데올로기국가장치 등)은 성이론을 보완할 때만 온전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런 발상은 이미 사회주의페미니즘 안에서 계급에 대한 ‘성의 독자성’에 주목하는 ‘이중체계론’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국가’로 정식화된 바 있기에(Eisenstein 1983; 하트만, 하이디·번햄, 린다 외 1989 참조) 그리 낮설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이 의존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 알튀세,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등이 주장하는 기계론적, 도구론적인 발상이라는 사실이다(고정갑희 2011, 214-215 참조). 그 논의들은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보장하는 고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에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그 외부에서 국가를 파괴해야 한다는 발상, 혹은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해를 보장하는 사물(thing)로서의 도구이기에 반대로 선거를 통해 그것을 장악하기만 하면 자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그런 발상들에 기대는 것은 역설적인데, 그런 기계론, 도구론은 아래와 같은 ‘관계적 국가론’, 국가의 편재성 등을 기각하며 오히려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체성의 정치’, 혹은 조합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본질적인 실체(intrinsic entity)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자본과 마찬가지로 힘의 관계, 더 정확하게는 국가 안에서 반드시 특정한 형태(specific form)로 표현되는 계급과 계급 분파들 사이의 힘의 관계의 물질적 응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Poulantzas 2014, 128-129)”

“국가의 적극성과 편재성은… 그것이 구체적인 생산양식의 형태 속에서 정치-이데올로기적인 관계들을 응집, 응축, 물질화하고 구현하는 인자라는 것에 있다. 국가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 계급, 비계급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현실은 국가와 구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Jessop 1985, 118).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법 규정적 기능’과 ‘법 유지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폭력(벤야민 2008, 96)을 독점하여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국가(베버 1994, 208)를 ‘성장치’라는 범주에 넣어 시장, 종교, 가족, 미디어 등과 동일한 위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그렇다면 왜 알튀세는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이 ‘성장치’로 부르는 것들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로 범주화했을까(알튀세 1991, 88-94). 이런 질문에 직면해 알튀세의 이데올로기장치 개념으로는 신체와 같은 범주가 지배장치로 기능하는 것을 포착할 수 없다고 답하는 것(고정갑희 2011, 50)은 자명한 지적이라는 점에서 그 무엇도 말해주지 못한다. 알튀세의 그 개념, 범주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진보적 페미니즘, 특히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이 비판, 극복하고자 하는 것, 즉 M/W젠더체제가 재생산하고 있는 ‘공/사 구분’이 주어진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계급)투쟁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상부-하부구조론에 터한 기계론적 국가론’의 균열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녹보라적 패러다임’이 전향적인 이유는 그 인지,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녹, 보라, 적 각 운동들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관계들(노자관계, 젠더관계, 그것을 매개로 한 자연과의 관계

등)이 서로 외재하다가 특정한 국면에서 운동의 접합을 통해 선택적으로 조우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관계들이 서로 내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녹, 보라, 적 등의 현실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그것을 전략적인 실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이 주시하고 있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때, 기존의 질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한우리·김보명·나영·황주영 2018 참고). 하나의 예로 이른바 ‘생산(적색노동)/재생산(보라노동)’의 분리를 페미니즘이 집요하게 문제시하는 것(포르투나피 1997)을 중요한 이론적 쟁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생산에 외재하는 재생산이 생산과 같은 위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서로 내재되어 작동하는 ‘생산’, ‘재생산’이 있기에 자본의 가치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그때 이론적으로 ‘생산’, ‘재생산’이라는 각각의 개념은 자유주의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말하듯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다가 접합되는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 지시적인 것, 혹은 분석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이 점은 실천적인 운동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페미니즘운동이 M/W젠더체제 안에서 재생산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노동에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교환)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쟁점화시키는 것을 넘어, 자본의 가치실현과정에서 착취, 수탈, 차별, 배제되는 또 다른 이들의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헤게모니전략의 구사를 위한 내적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만일 전자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M/W젠더체제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기존의 질서를 강화하는 것,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켜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 공/사, 국가/(시민)사회, 정치/경제 등의 이분법

적인 구분, 더 나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구분하며 그 각각이 자기완결성을 지닌 실체(소체계)인 것처럼 간주하는 자유(다원)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넘어야 하는 이론, 실천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급진-페미니즘운동은 그런 전향적 제안을 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도구론, 기계론적인 인식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페미니즘운동 안에서 이미 일정 정도 수용된 바 있는 ‘관계적 국가론’(장미경, 1999, 제3부 1장과 2장 참고)으로 다가가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녹보라적 패러다임’이 발생론적인 차원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축보학’, 즉 성이 다른 관계들을 규정하거나, 그것을 추동시키는 본질적인 동인이라는 환원론의 위에서가 아니라 녹, 보라, 적의 관계들이 서로 내재하는 관계들로 되어 작동되고 있는, 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역사특수적 관계’를 전제로 할 때, 그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정합성,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자기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이 성평등한 현재-미래를 열어어나가는 이론, 실천의 도상에 위마드 등 급진페미니즘운동이 조성한 장애들 앞에서 정치적으로 머뭇거리게 되는 원인이 놓여 있다.

국가론과 관련,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의 ‘적녹보라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제안이 현실 운동 속에서 의미 있는 전략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 녹, 보라의 관계들이 서로 내재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관계적 국가론’과의 대화를 통해 그 패러다임에 조응하는 국가에 대한 발상을 조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 의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대중운동으로서의 위마드 등 급진페미니즘에 ‘성환원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 공유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질 수 있게 될 것이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페미니즘운동은 여성의 평등을 위해 적지 않은 이론, 실천적 성과를 내며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운동은 그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 장애, 즉 '보수-수구독점의 정당-정치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인 작업과는 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런 경향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헤게모니를 넘어서기 위한 '페미니즘국가론'의 빈곤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런 현실은 페미니즘운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운동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녹보라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라는 것은 대중적인 지지 정도가 아니라 특정 사회에서, 더 나아가 지구지역적인 수준에서 가장 착취, 수탈, 배제,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하느냐 여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며 그런 의미인 한해서 그것은 변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은 지금까지 한국의 페미니즘운동들이 국가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며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개괄하면서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의 국가론에 대한 비평과 함께 작은 제언을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 모색의 작업이 페미니즘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급진-변혁적 페미니즘운동'이 함께 하고자 호명하고 있는 녹, 적 등도 그 제안의 정치적 의미, 무게를 외면하지 못하는 한 그 공통의 과제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기에 그렇다.

(2022년 10월 05일 접수, 11월 04일 심사완료, 11월 05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고정갑희. 2011. 『성이론-성관계. 성노동. 성장치』.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고정갑희. 2017. 『가부장체제론과 적녹보라페러다임: 체제론의 전환과 운동철학의 전환』. 서울: 액티비즘.
- 고정갑희. 2019. "페미니즘의 전환과 적녹보라페러다임". 맑스코뮤날레 지음. 『전환기의 한국사회』. 서울: 갈무리. 407-430.
- 권김현영·루인·정희진·한채윤. 2019. 『미투의 정치학』. 서울: 교양인.
- 김경화·김둘순·최유진·장운선·문희영·박기남·장정순. 2012.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책을 위한 연구 V: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화·나성은. 2017. "한국 성주류화 정책과 젠더-거버넌스의 특성".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979-3996.
- 김동춘. 1995. 『한국사회노동자연구-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 김리나. 2017. "메갈리안들의 '여성' 범주 기획과 연대". 『한국여성학』. 33권 3호. 109-140.
- 김민정. 2020. "2015년 이후 한국 여성운동의 새로운 동향". 『정치정보연구』. 제23권 2호. 59-88.
- 김보명. 2016. "페미니즘 정치학. 역사적 시간. 그리고 인종적 차이-미국 제2물결 페미니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2(4). 119-155.
- 김성국. 1995.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이론".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15-59.
- 김영희. 2002. "진보적 여성운동론의 재검토". 『페미니즘연구』. 2호.

11-42.

- 김은실. 2006. “여성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51호. 48-69.
- 네오클레우스, 마크. 정준영 옮김. 2002. 『파시즘』. 서울: 이후.
- 데리다, 자크. 진태원 옮김. 2004. 『법의 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레닌, 블라디미르 일리치. 문성원·안규남 옮김. 2015. 『국가와 혁명』. 서울: 돌베개.
- 마경희. 2009.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여성학』. 23(1). 39-67.
- 맑스, 칼·엔겔스, 프리드리히. 김태호 옮김. 2016. 『공산주의선언』. 서울: 박종철출판사.
- 서두원. 2012. “젠더 제도화의 결과와 한국 여성운동의 동향”. 『아세아연구』. 55(1). 162-192.
- 손희정. 2017. 『페미니즘 리부트』. 서울: 나무연필.
- 신상숙. 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국가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페미니즘연구』. 제11권 2호. 153 - 197.
- 알튀세, 루이스. 김동수 옮김. 1991.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서의 주장』. 서울: 솔. 75-130.
- 양현아. 2006. “1990년대 한국가족정책의 과제”.
심영희·김경희·백진아·양현아·엄규숙·이혜경 공저. 『한국의 젠더정치와 여성정책』. 서울: 나남.
- 요시유키, 사토. 김상운 옮김. 2015. 『신자유주의와 권력-자기 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 되기』. 서울: 후마니타스.
- 유경순. 2020. “1980년대 여성평우회의 기층여성 중심의 활동과 여성운동의 방향 논쟁”. 『역사문제연구』. 43권 1호. 457-499.

- 이광일. 2009a. “진보적 정당의 분화와 새로운 진보·좌파 정치의 모색: 이념의 재구성고 숙고해야 할 몇 가지 문제”. 『뉴 래디컬 리뷰』. 40호. 142-172.
- 이광일. 2009b.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서울: 메이데이.
- 이옥지·강인순. 2001.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1』. 서울: 한울.
- 이재경 엮음. 2010. 『국가와 젠더』. 서울: 한울.
- 장미경. 1999.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서울: 문화과학사.
- 장미경. 2009. “개발국가시기, 새마을운동 부녀지도자의 정체성의 정치-부녀지도자의 성공사례, 수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175-190.
- 정사강·이재원·박동숙. 2021. “나에게 해화역 시위는 무엇이었나? 2030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7호. 116-148.
- 제습, 밥. 유범상 옮김. 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국가의 제자리 찾기』. 서울: 한울.
- 최장집. 1989.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한국 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서울: 까치.
- 최진협. 2018. “페미니즘 백래시 사례모음”. 여성민우회.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자료집.
- 태혜숙. 2007. “생태민주주의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위하여”. 『문화과학』. 49호. 27-38.
- 태혜숙. 2008. “적·녹·보라색의 동맹을 위하여”. 『문화과학』. 56호. 98-115.
- 팔루디, 수전. 황성원 옮김. 2017. 『백래시』. 서울: 아르테.
- 포르투나띠, 레오볼디나. 윤수중 역. 1997. 『재생산의 비밀』. 서울: 박종철출판사.

- 하트만, 하이다번햄, 린다 외, 김혜경·김애령 옮김. 1989.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서울: 태암.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7.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의 역사』. 서울: 당대.
- 한우라·김보명·나영·황주영. 2018. 『교차성x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 허성우, 2009. “최근 한국 사회운동/여성운동의 적-녹-보 연대 담론 생산의 조건 : 맥락화의 문제”. 『진보평론』. 42. 329-362.
- 허성우. 2006. “지구화와 지역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22(3). 169-198.
- 홀, 슈트어트. 임영호 옮김. 2009.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서울: 한나래.
- 황은정, 배화정, 오나경, 송문희. 2015. “성주류화정책을 위한 젠더거버넌스의 형성가능성-서울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모니터링과정분석”. 『사회과학연구』. 31(2). 183-208.
-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사회』. 114호. 18-51.
- Burnham, James. 2021. *The Managerial Revolution: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London: Lume Books.
- Clarke, Simon(ed.). 1991. *State Deb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 Connell, R.W.. “The State, Gender, and Sexual Politics: Theory and Appraisal.” *Theory and Society*. 19(5). 507-544.
- Domhoff, G. William. 1967. *Who Rules America?*.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Eisenstein, Zillah. 1983. “The State, the Patriarchal Family, and Working Mothers.” in Irene Diamond(eds.). *Families, Politics and Public Policy: A Feminist Dialogue on Women*

- and the State*. New York: Longman. 41-58.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 Wishart.
- Jessop, B.. 1985. *Nicos Poulantzas. Marxist Teory and
Political Strategy*. London: Macmillan.
- Lister, R.. 1997.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
Basingstoke: Macmillan.
- Poulantzas, N.. 1976. *The Crisis of the Dictatorship-Portugal.
Greece. Spain*. London: NLB.
- _____. 2014.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Verso.
- Wisler, D. and Giugni, M.G.. 1996. "Social Movements and
Institutional Selectivity". *Sociological Perspectives*. 39(1).
85-109.

A Study on Korean Feminist Movement and the Possibility of
'Green-Purple-Red Politics' through the State Theory

Lee Kwang-II*

This article divides the Korean feminist movement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into three periods based on the 1991 'May Struggle' and the 2016 'Gangnam Station Murder Case', and looks at the trajectory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feminist movements developed in each one through the theory of the state, and examines their historical meanings and limita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liberal(pluralistic) state theory as a dominant ideology exerted its influence inside and outside the movem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feminist movements developed in each period were recognized. Finally, this article reveal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nings of the 'green purple red paradigm',

* Lecturer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hich the radical-transformative feminist movement proposed to break away from the 'politics of identity' at a time when the radical feminist movement with mass movement characteristics such as Womad, 'the politics of identity' itself, emerged and explores the reasons why the theory of the state that conforms to such a forward-looking proposal is poor and what is needed for its reconstruction.

key words: state theory, feminism, gender-mainstreaming, liberal(pluralistic) state theory, Womad, 'green purple red paradigm'